

조직개편 협상 난항...새 정부 스케줄 차질

‘비상조각’ 파행 출범 불가피

극적 타결 이뤄도 출범전 장관 임명은 못해  
李당선인측 “흐리다가 개기도”...상황 주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협상이 좀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새 정부의 파행출범이 현실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비상조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강경 스탠스로 일관해 온 이명박 당선인측이 주말을 넘기면서 “협상을 끝까지 해볼 것”이라며 다시금 타협론 쪽으로 자세를 고쳐잡고 있으나 협상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동권 인수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협상전망에 대해 “흐리기도 하다가 개기도 하다가 반짝 햇볕도 났다가 먹구름도 일고 천둥 치고 그랬다”며 “다시 진정이 되면서 약간 개는 분위기가 있다. 그게 협상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끓어오른(협상) 연락망이 다시 복원됐다. 상황변화가 있으며 개방방두니 좀 더 기다려달라”면서 “다만 쟁하고 해가 날지 다시 어두워질지는 좀 지나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회박하긴 하지만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가운데 협상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정상 출범 여부는 물론 정국상황은 180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낙관적인 견지에서 볼 때 양측이 18일 담판을 통해 극적 타결을 이뤄낸다면 국회는 빠르면 19일 본회의에서 가가

스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정상적으로 조각명단을 발표한 뒤 장관 후보자들에게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발송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법률로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정치권이 법률 통과를 전제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정치적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이 당선인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당선인은 물리적으로 새 정부 출범 전에 장관을 공식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하더라도 7일이 걸리는 데다 설령 그 이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총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장관 임명제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의 한 측근은 “장관 임명 제청은 총리만이 할 수 있다”면서 “어차피 장관 임명은 26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협상결렬시에는 이 당선인측이 비상조

각 절차를 밟으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통합민주당의 강력 반발과 함께 20일부터 시작되는 총리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 무산에 대한 책임론이 오는 4·9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최악의 경우 총선 전까지도 정상적인 조각을 꾸릴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당선인은 총선 후 6월 국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처리한 뒤 조각을 단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개월간 국정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물론 6월 국회 처리도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을 때의 얘기다.  
이 당선인측은 현재 협상결렬시에 대비 ▲장관 보직 없이 국무위원 후보자만 임명하는 방안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을 임명한 뒤 추후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 후 장관 이름을 바꿔 재임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 모두 권법·위법 논란과 함께 일정 정도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핵심 측근은 “현재로서는 협상이 타결되든 결렬되든 새 정부의 완벽한 출범은 어렵게 됐다”면서 “협상결렬을 가정한다면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조각 단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李당선인-靑참모 국정 워크숍 브리핑



이명박 당선인이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장설립 규제 빠른 시간 내 푼다

“국민 실질소득 증가 추구...식품 표시위반 엄히 처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는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에 우선순위를 주어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권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17일 새 정부 국정운영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규제개혁 과제는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16~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유우익 대통령 실장실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내각자 및 비서관,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단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워크

숍’을 가졌다.  
이 대변인은 중소기업 진흥책과 관련,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이 너무 많고 복잡한 만큼 지원대책을 늘리기 위해 정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기관, 은행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지난 5년간 연평균 GDP(국내총생산)는 4.2% 증가했지만 보험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면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에 더욱

주안점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이밖에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및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 대폭 인상 ▲국가경쟁력강화특위내 ‘투자유치 TF’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TF’ 전환 ▲기후변화 문제의 국가적 여젠다 설정 ▲‘받는 부패’뿐 아니라 ‘주는 부패’ 처벌을 통한 공직자 부패 척결 ▲총리실 산하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 설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신(新)사회정책 모델 구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새 정부는 방화로 전선문 송래문 복원대책과 관련, 종속복원을 피하고 신중하고 완벽한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복원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일부, 5본부·1단→1실·3국으로 축소”

정부 조직 개편 논의 결과로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현재 5본부·1지단단위로 구성된 통일부 본부 조직을 1실(室)·3국(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은 통일부 존치시 현재의 혁신재정기획본부를 실로 만들고, 나머지 4개 본부는 3국으로 재편하는 한편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 정책홍보본부의 정책 부문과 정보분석본부를 묶고 현 사회문화교류본부의 교류 관련 부문과 경협본부를 통합해 각각 국으로 만드는 한편 사회문화교류본부의 인도적 지원 및 협력 분야는 별도 국으로 두게 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현재 정책홍보본부 내에 홍보관리과 산하 4개 팀으로 구성된 홍보 관련 조직은 축소 조정을 거쳐 장관 직속 조직으로 옮겨 가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운용은 통일부에 계속 맡겨지고 통일교육원과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하나원 등 현재의 통일부 산하 조직도 일단은 존치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통일부 존치 문제가 결론나지 않은 만큼 최종 방안은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 협상 등 판단 미흡”

새정부 ‘정무기능’ 보완론 대두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및 조각 발표와 관련해 일부 혼선이 나타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부보좌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장관 내각자의 국정과제 워크숍 참석’을 발표했다가 취소키로 결정한 해프닝을 두고 뒷말이 적지 않은 것. 사실상의 조각 발표에 상당하는 국무위원

내각자의 16일 워크숍 참석 방침을 발표하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취소한 것은 이 당선인측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 이 당선인측 내부에서는 조각 명단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위원 내각자들의 워크숍 참석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16일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는 “지역구에 가보면 ‘더 멀어 보이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왜 오세 이렇게 잘 못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 과정에서 협상 전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는 당선인측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신당이 지휘체계가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협상팀이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못한 채 통일부 등을 하나씩 내주면서 신당에 끌려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역풍’을 맞은 송래문 국민연금 모금 운동 제간도 정부조직개편이 부족했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을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전남고시학원 236-2467~8

바이오싱크케어  
합격 3월 3일 전액무료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건물 매각  
017-622-8753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합격 3월 3일 전액무료  
새로운 행정고시학원